

10년 공들인 K-벼 프로젝트, 아프리카 식량난 해법 제시

농진청, 아프리카 파트너십 결실
15개국서 벼 품종 71개 개발·등록
23개국 벼 육종가 44명 배출 성공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현장.

/농진청

농촌진흥청이 그간 추진한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 15개국에서 벼 품종 70여 개를 개발하고 벼 육종가 44명을 배출해 내는 성과를 냈다. 무려 10년 가까이 공들여 온 이 사업은, 한국의 통일형 벼 품종과 육종기술 등을 활용해 현지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자급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진청은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1단계 사업(2016~2025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기구인 ‘아프리카 벼 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쌀은 아프리카에서 옥수수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식량작물이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은 탓에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벼 생산성은 헥타르(ha)당 2.4톤(t)으로 아시아(5.0t)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쌀 수요가 매년 6% 넘게 증가하며 주요 소비국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농진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약 배양(꽃가루배양) 기술과 밀양, 태백, 한아름 등 통일형 벼 품종을 활용해 다수확 품종 개발을 시도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15개국에서 총 71개 품종을 개발·등록했다. 이들 품종의 수량은 대부분 ha당 6.6~6.8t 수준으로 현

지 품종보다 생산성이 높고 밥맛과 향도 우수하다.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네갈에서는 이스리(ISRIZ) 6·7·16·17·P01·P02 등 6개 품종이 개발·보급됐다. 이 가운데 이스리 6과 이스리 7은 각각 한국 품종인 밀양23호와 태백을 기반으로 육종한 품종이다. 수량이 ha당

7.2~7.5t으로, 현지 품종인 사헬 대비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봉에서는 세이, 음보마, 무카파시 등 3개 품종이 개발·등록됐다. 이들 품종은 통일형 벼 품종인 밀양과 한아름 등을 활용해 육종했고, 수량은 ha당 7~8t 수준이다. 특히 가봉은 지난해 8월 이들 품종을 자국 최초의 벼 품종으로 등록한 바 있다. 가봉농업연구소(IRAF) 소속 윤넬 무쿰비 박사의 계획안도 전해졌다. 그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쌀 생산을 위해 3개 품종에 대해 약 9 정도 물량 확보를 목표로 종자를 증식하고 있다. 80명의 벼 재배 전문인력도 양성 중”이라고 했다. 또 “올해 전국 60개 농업협동조합 1100여 명의 농업인이 세이 품종을 중심으로 벼 시험재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품종개발과 더불어 현지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 4개월 집중 훈련을 통해 23개국에서 총 44명의 벼 육종가를 배출했다.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국제개발협력사업인 ‘K-라이스벨트’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세네갈, 감비아, 기니, 가나,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 거점국에 우

량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아프리카 전역에 종자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벼 종자 생산량이 2023년 2321t에서 2025년 3562t, 2026년 6365t으로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연간 1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에도 착수한다. 관계당 중심의 품종 개발에서 나아가 기온·병해·염해에 강한 품종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단계에서 개발된 벼 품종들을 국가 자원화하기 위해,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해 국내 벼 육종가 및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46개 품종을 기탁했다.

농진청 기술협력국의 최광호 국장은 “아프리카 벼개발 파트너십 사업성과는 아프리카의 숙원인 쌀 자급자족과 식량안보의 발판을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K-벼재배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돕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부산항만공사, 온실가스 감축·무재해 ‘성과’

6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속가능 항만 생태계 조성 앞장”



부산항만공사의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산항만공사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펴냈다. 책자에는 지난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과 성과를 비롯해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이 보고서는 2021 GRI 지침과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ESG 공시 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 부산항만공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6번째이다. 2014년 첫 보고서 이후 2021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저·무탄소 항만 기반 시설과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통한 친환경 항만 구현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 ▲연관

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반부패·청렴경영 강화 등 ESG 전 분야 활동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23.5% 감축 ▲4년 연속 중대재해 ‘0’ 달성 및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반부패·청렴 위반 사례 ‘0’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우리 공사의 ESG 경

영 노력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항만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공사는 올해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모기업과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 간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공사는 앞서 해당 사업에 4년 연속으로 참여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2차례 수상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산자원공단, 불법어업 대응 강화 논의

‘PSMA 10주년 포럼’ 개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기념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PSMA란 불법어업 선박의 항만 이용 및 불법 어획물의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수단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참석자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포럼에는 FAO를 비롯해 협정당사국과 국제기구, 주한 외교관 등 120여 명의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PSMA 당사국 역량 강화’와 ‘글로벌 정보교환 시스템(GIES) 활용 확대’를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체계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PSMA 이행 역량 강화 ▲법·제도 정비 및 검사관 교육 확대 ▲GIES 기반 정보교환 활성화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PSMA 이행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회원국의 이행역량 강화와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기념 전문가 포럼.

국가 간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 이사장은 “PSMA 발효 10주년은 지난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역량 강화와 데이터 기반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국제 수산 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이호현(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에너지비즈니스포럼에 참석했다. /기후부

기후부, 미국과 에너지·원자력 협력 강화

원자력협정 70주년 계기
AI 시대 전력 안보 해법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미국 측과 에너지 안보 공조 및 민·관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한·미원자력협정 체결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11일 기후부에 따르면 이호현 기후부 제2 차관은 지난 8~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이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확대를 위한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한미 간 원자력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 원자력 동맹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이 차관은 첫날인 8일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 개최한 ‘한미 원자력협정 7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0년에 걸친 양국 원자력 협력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차세대 원자력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핵 비확산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자력 전 주기에 걸친 산업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의 틀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9일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 각국 고위급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리더들이 참석한 애틀랜틱 카운슬 제10차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차관은 ‘전기화 시대의 전력 안보’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력 계통의 회복력,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핵심 광물 공급망이 전력 안보를 좌우하는 새로운 길목으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의 5대 전력 안보 전략도 소개했다. 국가전력망 선제 투자, 기가와트(GW)급 ESS 등 유연성 지원 확보, 장기 계약·유연성 시장 도입, 전력 거버넌스 개편, 핵심 광물·전력 설비 공급망 국제 연대 등이다.

이어 10일에는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 차관과 알렉스 피츠 시먼스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양국이 직면한 에너지 안보 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 행사는 2024년 4월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정례화에 합의한 민간 협력 창구다. 올해 포럼에서는 에너지 금융·투자 지원, 전력 그리드·ESS 강화 등을 주제로 미래 협력 기회와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측은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